

광주일보, 광주·전남 지방의원 당선자 168명 설문조사

“단체장 선심행정이 가장 문제”

◇지방자치 성과와 반성=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회의 단체장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0%나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지어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응답도 10.9%나 됐다. 반면 25.5%는 '적절했다'고, 3.6%는 '(견제가) 심했다'고 답했다.

5·31 지방선거 결과 사실상 민주당의 독점체제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작동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의원들의 자치단체 비리나 예산낭비,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민선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는 응답자의 64.8%가 선심행정을 지적,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지자체장의 선심행정 정도가 심했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인사권 남용(12.7%)과 예산낭비(9.7%), 부정부패(8.5%), 난개발(2.4%), 규제소홀로 인한 기초질서 문란(1.8%)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정치와 지방의회 관계=5·31 지방선거 이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지방의원 당선자들 역시 정당공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만 정당공천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3.8%로 가장 많았고 '광역단체장만 정당공천해야 한다'는 답변도 23.8%나 됐다. 그 동안 선거에서 보듯 정당공천으로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측화와 지역사회 분열만 가속화시켜왔다는 판단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운영과 의장단 선출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개입이나 관여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입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3%나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율성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응답자도 28.7%나 됐다.

◇지방의회 운영='교황선출식'인 현행 지방의회 의장 선거방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5%가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의 기회가 부여하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고 3.6%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38.1%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12.5%의 당선자는 아예 '유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과 관련, '지방의회 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답변이 88.7%로 압도적이었고 11.3%만이 '현행대로 단체장이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당선자들의 대부분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관련, 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의장 귀속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치 규제=자치단체장 연임을 3회로 제한 규정에 대해 당선자의 대부분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응답자의 35.6%는 '현 제도가 타당하다'고 답했으며 39.3%는 '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제시했다. 또 '연임 3회만 아니라 3회를 초과하는 것을 모두 막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

다른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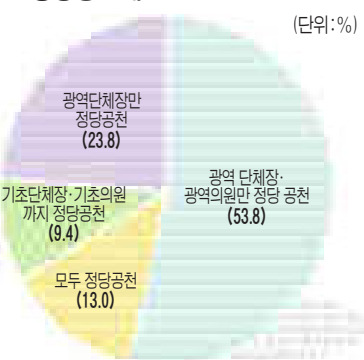
◇중앙정부 권한이양=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4.2%는 '미흡한 편이다', 32.7%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6.9%가 권한이양 정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만이 '그런대로 괜찮은 수준이다'고 답했고 '흡족한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권한 이양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분야로는 69.3%가 재정운영권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치조직권(18.1%), 교육자치권(8.4%), 환경관리권(3.6%), 치안권(0.6%)을 각각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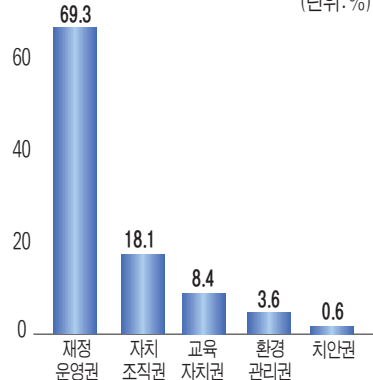
◇향후 과제=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8%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꼽았으며 이어 33.7%가 '주민의 참여 의식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12.7%가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4.8%가

97% “중앙정부 권한이양 미흡 불만”
45% “의정비 불만족스럽지만 수용”
39% “단체장 연임 2회로 제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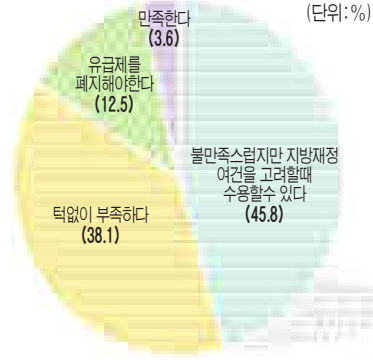
■ 정당공천제



■ 중앙 정부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분야



■ 지방의원 의정비 만족도



자 12.2%나 됐다. 3선 연임 제한이 '공무담임권 침해'고 시민들의 공직자 선택권을 막는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자치 선출직 가운데 광역단체장만이 둘 수 있는 후원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기초단체장 및 모든 지방의원'으로 확대, 20.1%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까지 확대, 8.5%는 '기초단체장까지 확대'를 각각 주장했다. 후원회 허용 범위를 확대해 능력 있는 인사가 선거자금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당선 이후 선거자금 등의 보상심리에

‘단체장 및 지방의원 비리 방지대책 마련’을 각각 지적했다.

또 향후 의정 활동시 주력할 분야로는 농업·농촌문제 해결(37.7%)과 소외 계층 복지 확대(34.6%)가 가장 많았다. 이어 20.4%가 경제활성화, 3.7%가 지역개발, 2.5%가 교육여건 개선, 1.2%가 교통문제 해결을 각각 택했다. 문화 예술 진흥을 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는 광주·전남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실감케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열린우리당 김한길(오른쪽),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뼨도 못좁힌 ‘사학법 절충’

우리-한나라 점점 못찾아 원내대표 회담 결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28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여야의 최대 쟁점법안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절충을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회담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특히 민생관련 법안인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도 예외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등(等)자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모든 민

생법안이 발목잡혀 있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양당은 28일 저녁 또는 29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개최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생·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모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당은 이날 3개월만에 재개된 고위 협의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비롯해 로스쿨법, 국방개혁 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8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이들 8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 체제 이후 뼈대대단 당정간 정책갈등을 일단 접고, 당장 발등의 불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흔들릴 없는 공조를 과시한 것. 한명숙 총리가 전날 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을 겨냥해 “사학법을 민생, 개혁법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청와대도 “법정부처 차원에서 6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었던 것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회의의 결론도출을 위한 ‘팀워크’였던 셈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日, 일본내 미군기지에 패트리엇 배치 합의

미국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내 미군 기지들에 첨단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배치키로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달 중순 합의된 이 같은 미제 요격미사일 배치 합의 내용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특히 적국의 탄도미사일과 cruise 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패트리엇 3(PAC-3)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일본 관리가 밝혔다.

그러나 패트리엇 3 미사일 배치의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미군이 올해말까지 오키나와섬 남부에 지대공 미사일 3-4개 포대를 설치하고 500-600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에 따르면, PAC-3 포대 1개에는 최대 16기의 미사일이 장착될 수 있다.

이 같은 미사일 배치 계획은 지난 17일 하와에서 열린 미일 군사회담때 미국측에 의해 제안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BC English Camp. Features a group of students and text: 'KBC 여름방학 영어 캠프', '2006년 여름방학 영어 캠프', '한국교육진흥원', 'KBC', '일본어', '독어', '프랑스어', '1588-8010, 062)367-0505 www.wawell.com'